

Ⅱ 광역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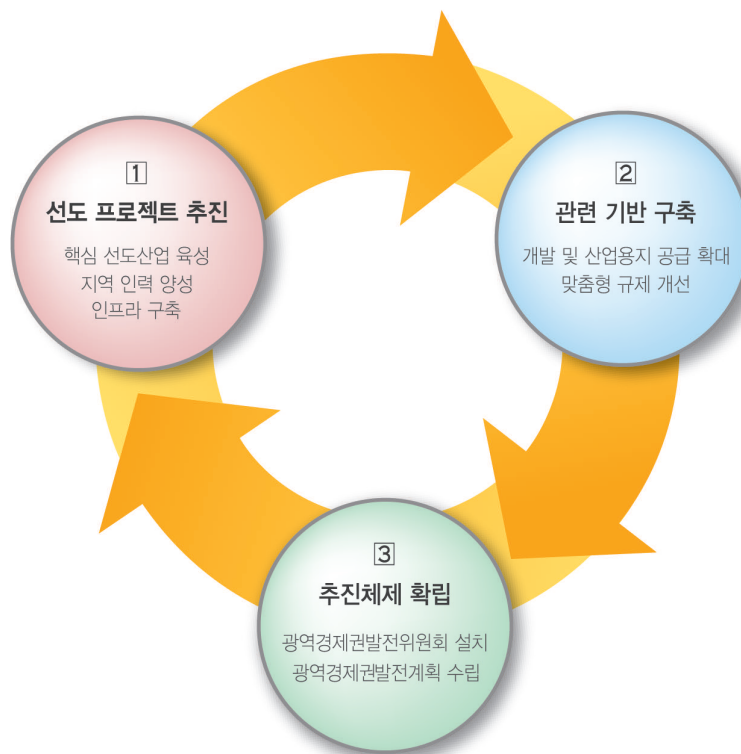
5+2 광역경제권의 개념 및 정책방향

광역경제권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개 이상의 광역시·도들이 경제활동의 상호연계성과 보완성을 근간으로 하여 통합된 권역을 말한다. 광역경제권의 추진배경은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창조를 목표로 삼고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관련 기반 구축, 추진 체계의 마련 등을 통해 지역특화발전을 추구한다.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창조
5+2 광역경제권별 특화 발전 비전 달성

추진전략



정책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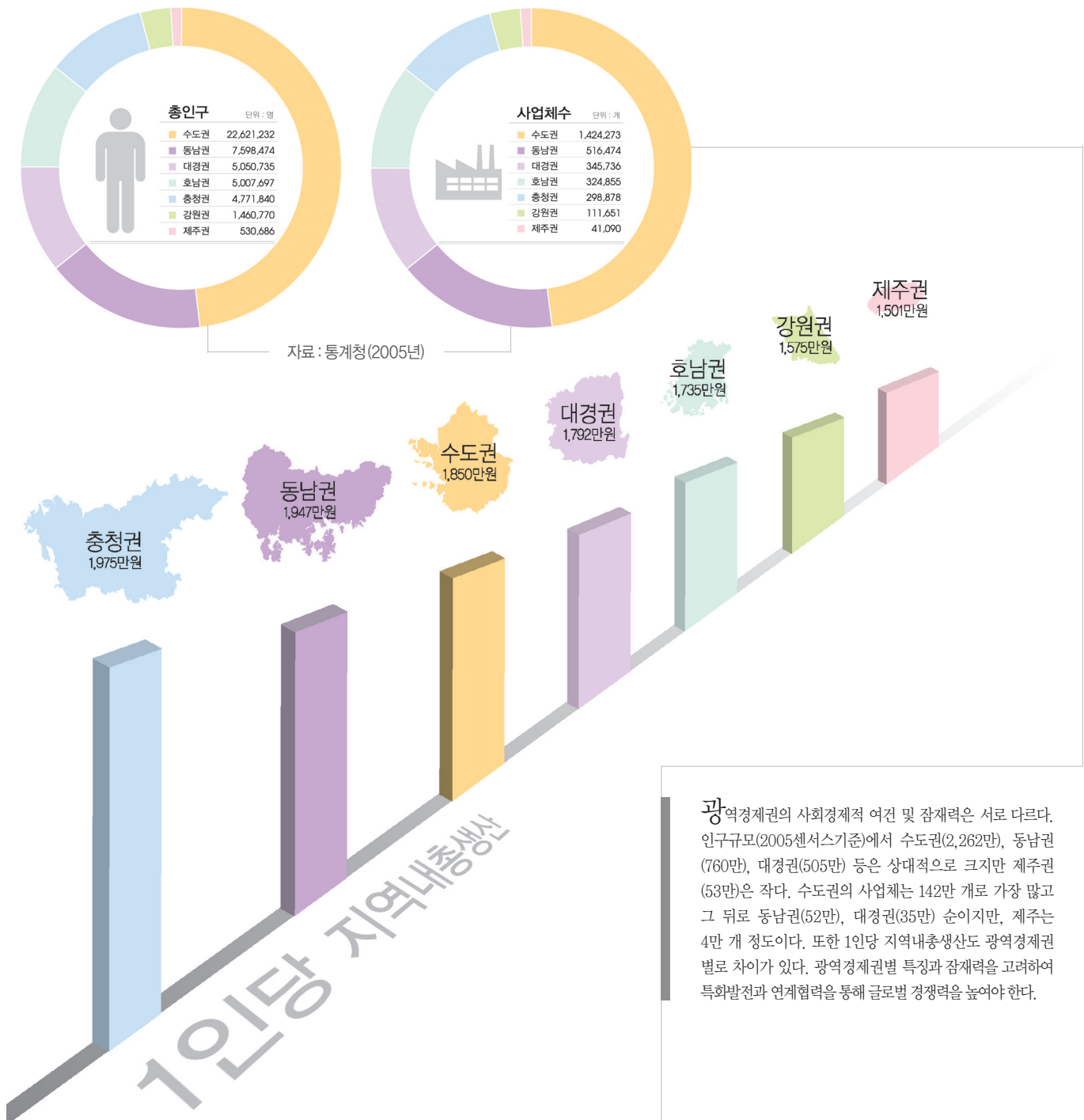
규모의 경제화

지역간 연계 상생

지역별 특화

지방분권

광역경제권은 인구, 산업, 인프라,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16개 시·도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5+2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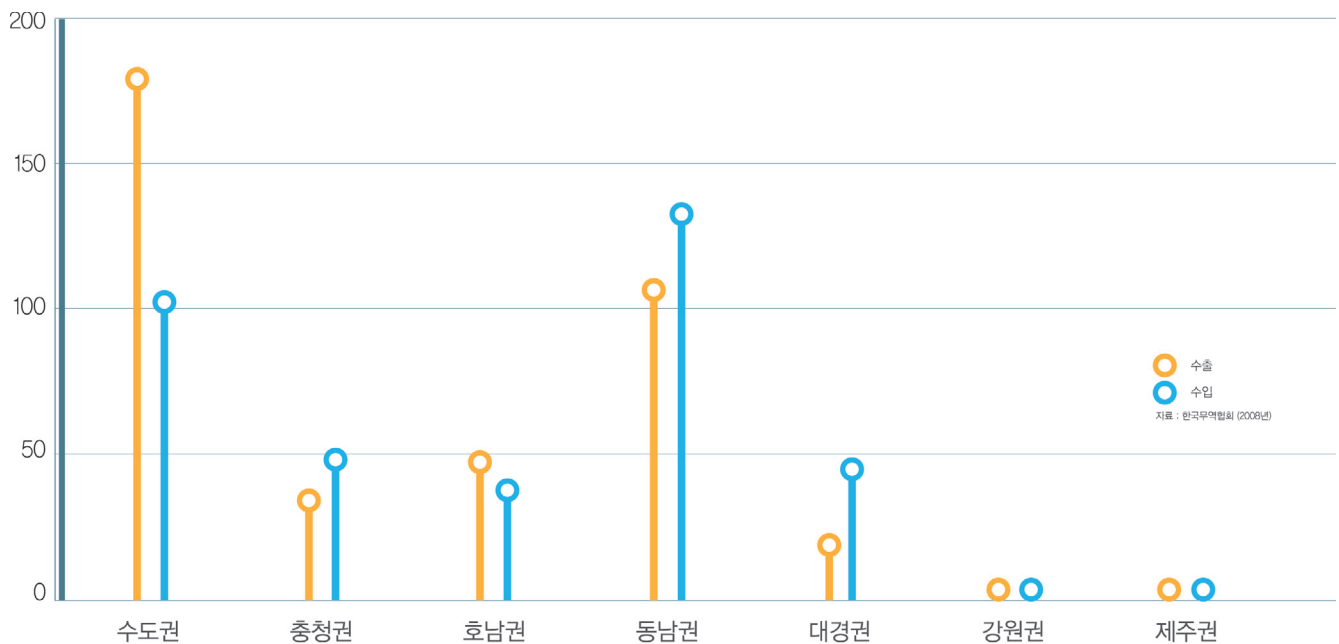


광역경제권별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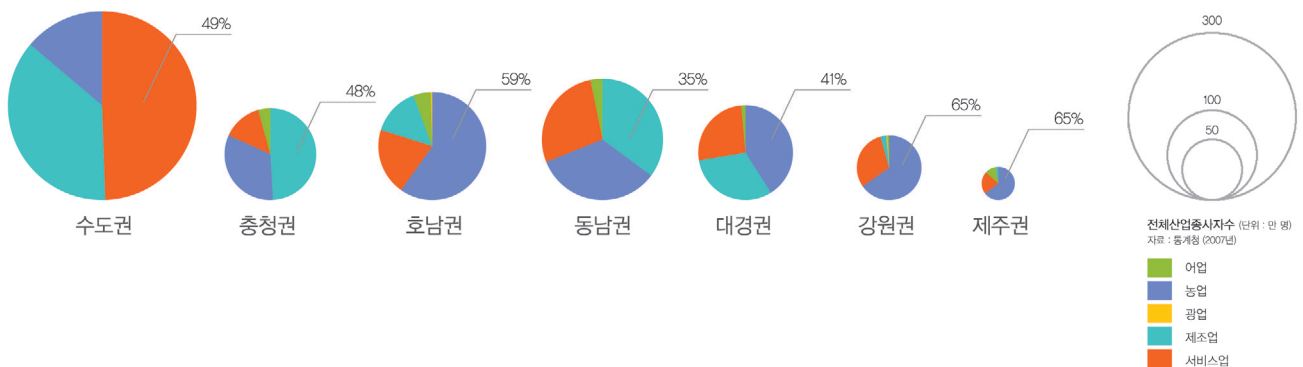
광역경제권별로 경제활동은 상당히 다르다. 수출입 현황은 규모와 구조면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수출입 규모는 수도권이 가장 크며, 그 뒤로 동남권과 호남권 순이다. 수출입 구조면에서도 수도권과 호남권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지만 동남권은 오히려 수입이 많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역경제권별 수출입 규모

(단위 : 1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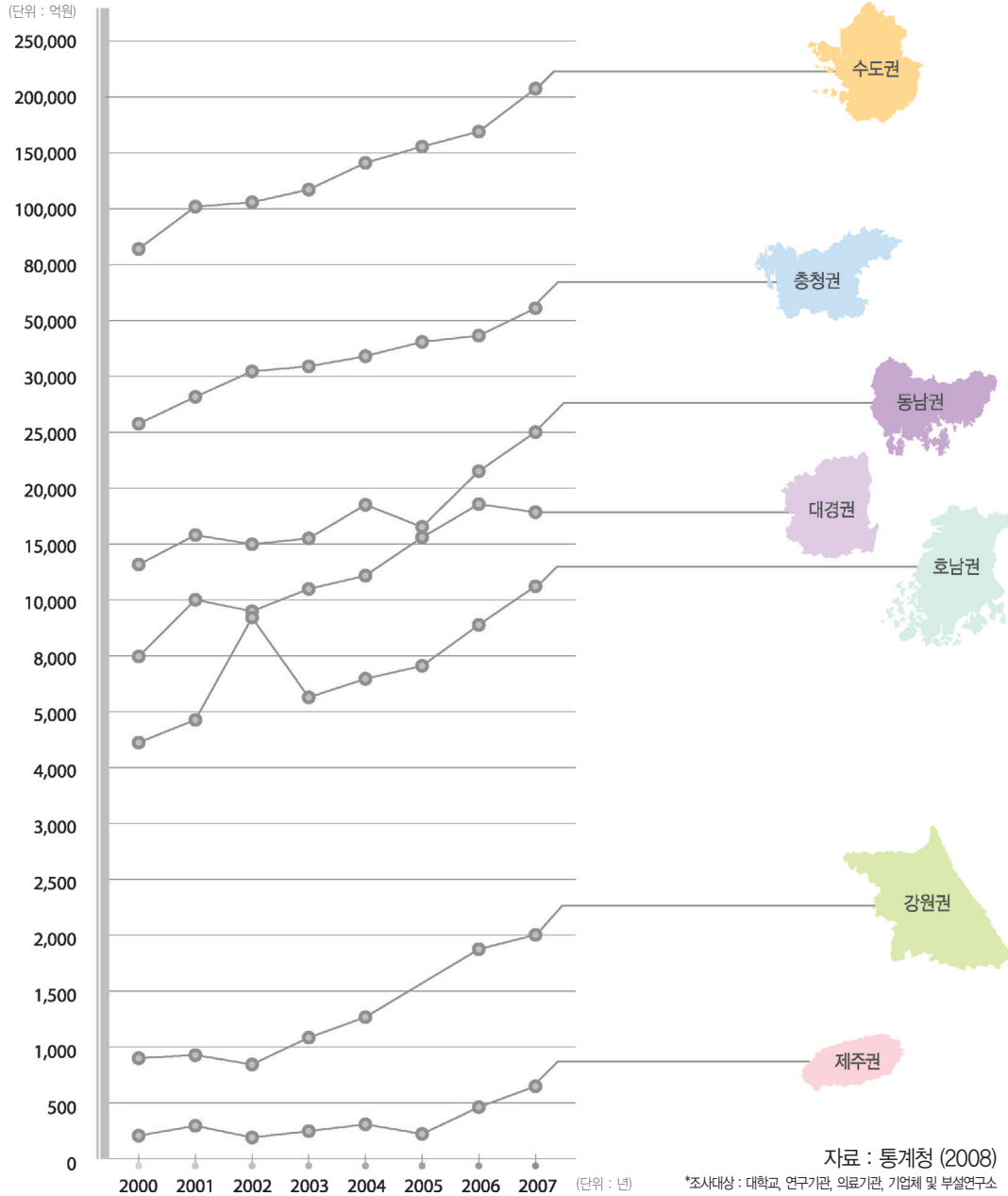


광역경제권별 산업종사자수와 산업구조



산업종사자수는 수도권(369만), 동남권(176만), 호남권(141만), 대경권(111만), 충청권(110만), 강원권(65만), 제주권(17만) 순으로 많다. 부문별 종사자수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반면에 강원권, 제주권, 호남권, 대경권은 농업비중이 높다. 한편, 충청권과 동남권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연구개발투자비*



광역경제권별로 연구개발투자비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전체 연구개발투자비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충청권의 연구개발투자비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순이다. 2000년 이후 각 광역경제권의 연구개발투자비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30대 선도프로젝트

광역경제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인프라 중심의 30대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선도프로젝트는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광역권의 특화발전 비전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향후 5년간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약50조 원(SOC예산의 50% 수준)이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광역경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망 확충, 광역경제권 간 연계 강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지방공항과 거점항만 육성 등을 포함한다. 주요 선도프로젝트에는 수도권의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과 도시철도 확충, 충청권의 자족형 세종시 건설과 고속도로 신설, 호남권의 새만금 조기 개발, 광주외곽순환도로 건설,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이 포함된다. 또한 강원권의 동서고속도로 건설과 원주-강릉 철도 건설, 대경권의 고속도로 건설과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 동남권의 신공항 건설과 부산외곽순환도로 구축, 제주권의 서귀포 크루즈항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이 포함된다.

- 자족형 세종시 건설
- 신교통수단 구축(대전-세종시-오송)
- 고속도로 신설(제2경부, 제2서해안)
- 환황해권 성장거점 연계(서해안 철도)
- 동서4축 고속도로(음성-제천)

- 새만금 조기 개발
- 여수 EXPO 기반시설 확충
-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연육교)
- 호남고속철도 건설
- 광주외곽순환도로 구축

서해안신산업벨트

- 서귀포 크루즈항
- 수요창출형 관광시설 건설
-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 서해선 연계 광역전철망 신설
- 도시철도 확충(인천2호선)
- 남북교류·접경벨트 개발

남북교류·접경벨트

- 동서고속도로 건설 (서울-춘천-양양)
- 동해고속도로 건설 (동해-삼척, 주문진-속초)
- 원주-강릉 철도 건설
-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북동연계권·거점핵심벨트

- 동서5축,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 동해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 3대 문화권 기반 조성
- 대구외곽순환도로 구축

남해안 선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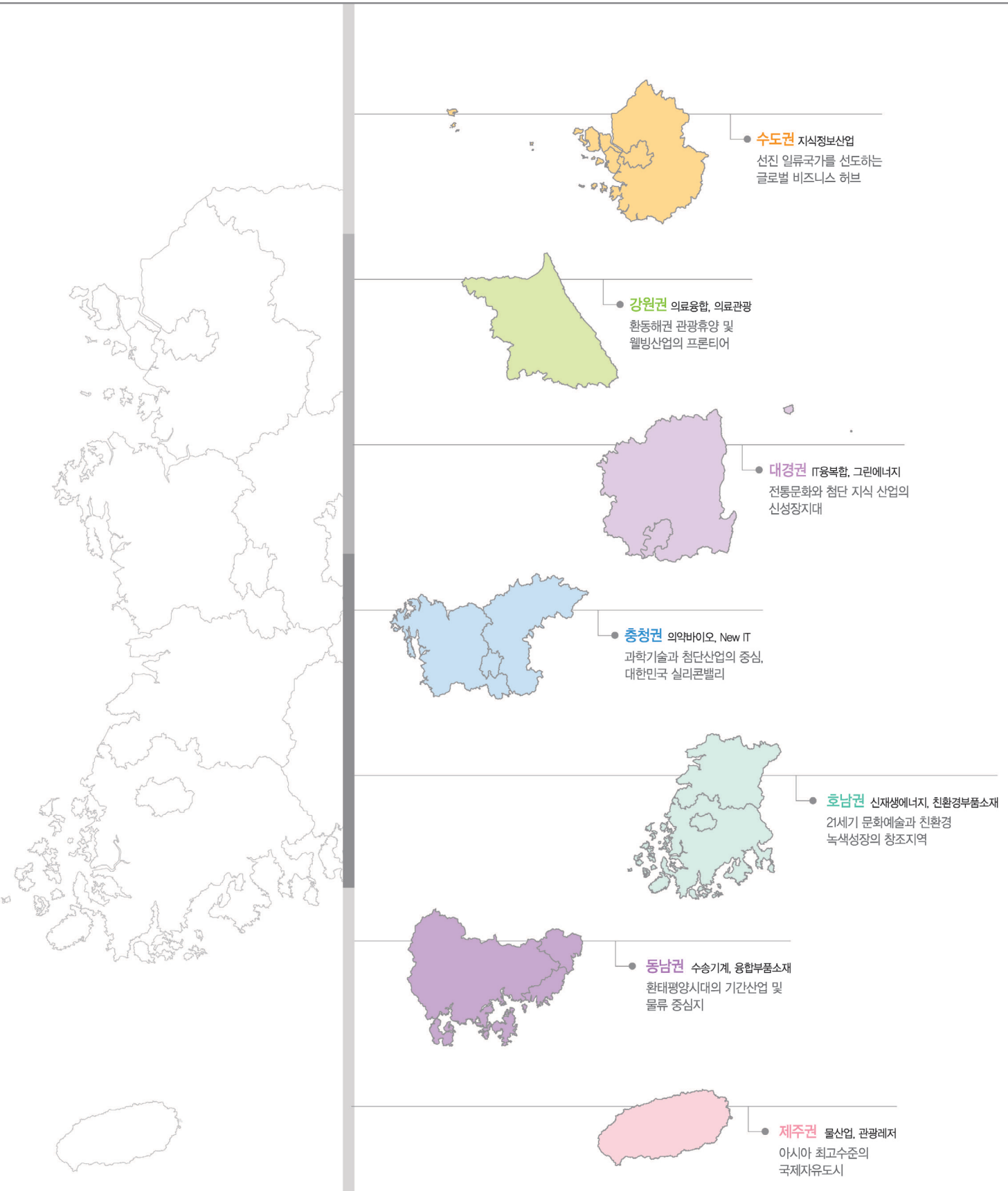
항공운송능력 확충

- 부산신항 배후산단 및 울산 테크노산단 육성
- 철도 복선전철화(부산-마산-진주-광양)
- 동서8축 확충(함양-울산)
- 동남권신공항 건설
- 해양관광 활성화(마산-거제 연육교)
- 부산외곽순환도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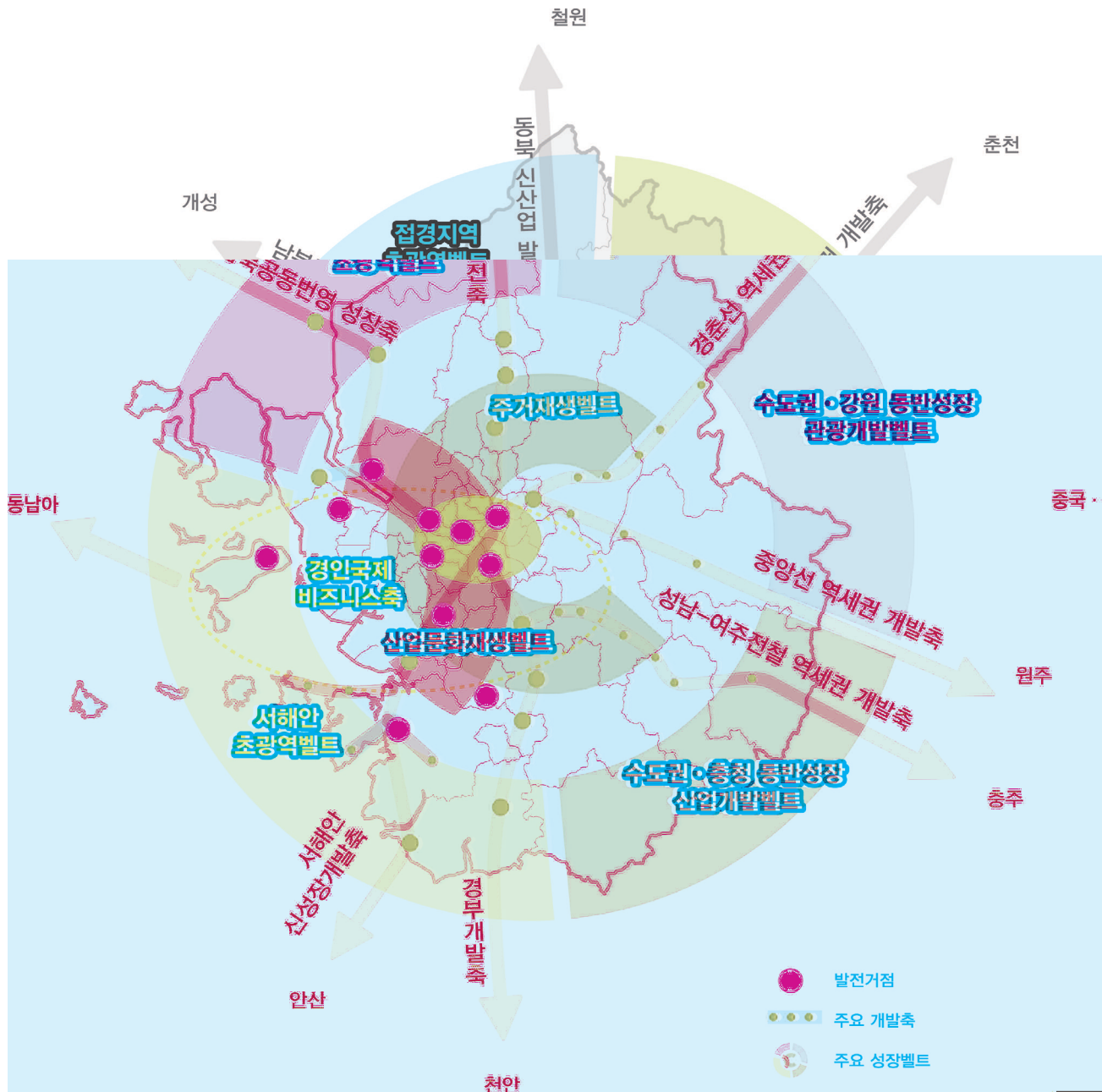
5+2 광역경제권별 비전 및 선도산업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별로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 시·도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선도산업 육성은 권역별로 1~2개의 핵심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표준·특허·국제협력·브랜드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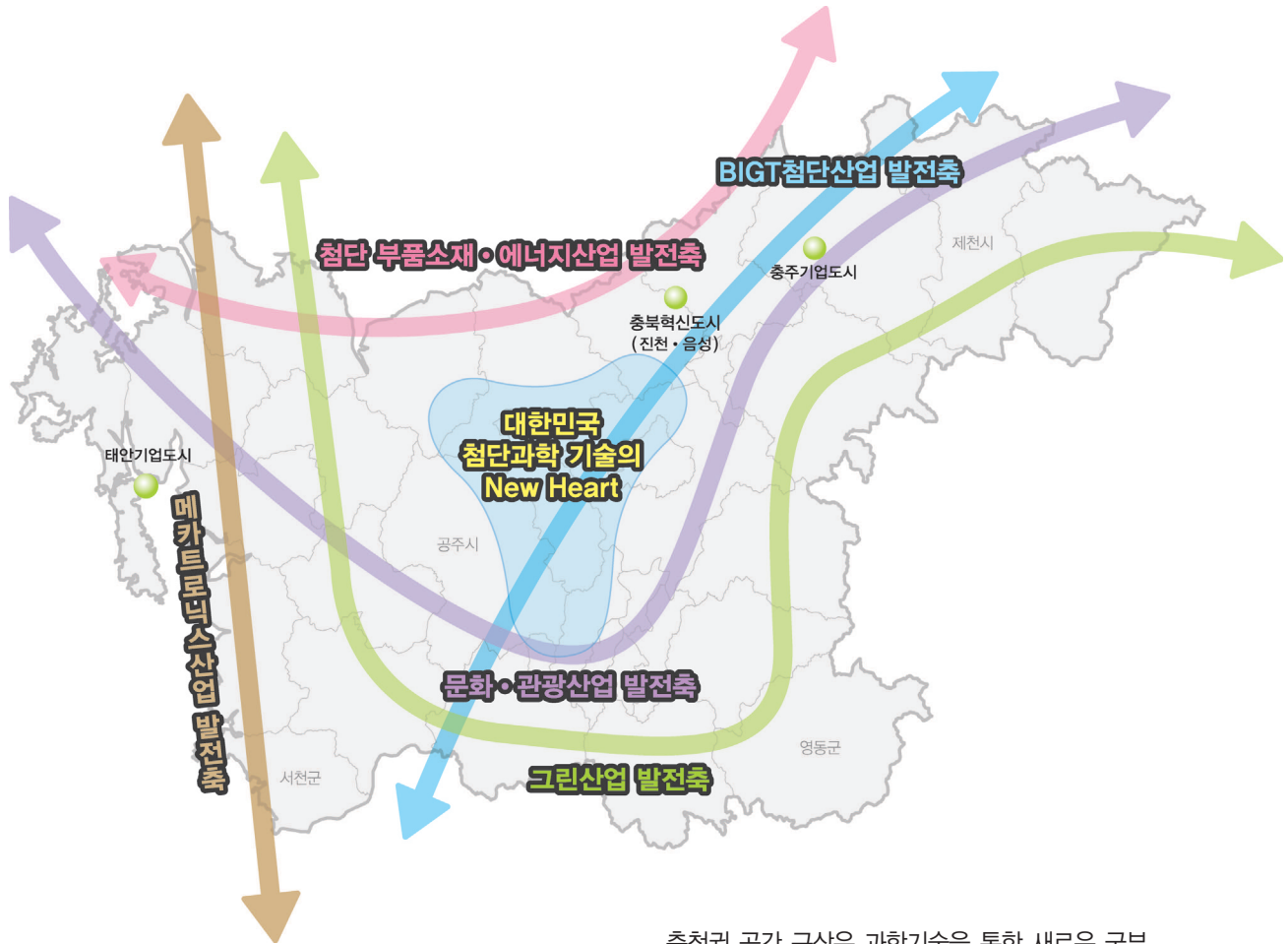
수도권 공간 구상



수도권 공간 구상은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축과 연계하여 광역적인 자족생활권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수도권의 광역화, 도시화 추세에 대응하여 광역경제권, 광역생활권 단위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내 혼잡과 환경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주요 성장축을 분산 육성하고, 성장축의 교차점에 광역거점도시, 지역거점도시, 부도심 등을 집중 육성한다. 각 성장축별로 광역급행철도 등 대중교통 및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 간 기능연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내 도(부)심 및 거점도시들의 특성화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업무거점, 산업 및 물류거점, 남북교류거점, 친환경적 레저/휴양벨트 등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노후화와 쇠퇴화가 진행 중인 경인지역은 주거재생벨트와 산업·문화 재생벨트로 발전시킨다.

충청권 공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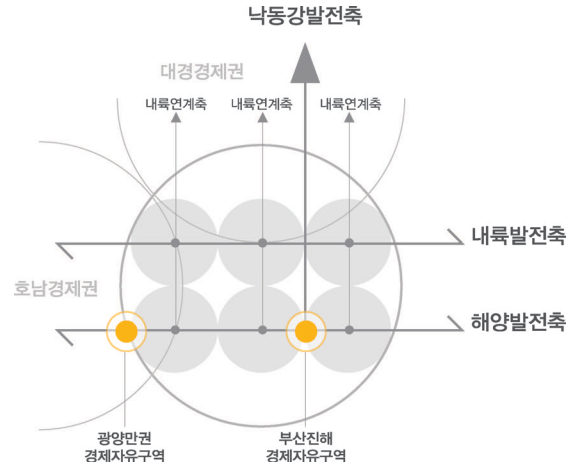


충청권 공간 구상은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국부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New Heart'를 설정한다. 이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지역 거점들이 광역적으로 연계·협력함으로써 모두 상생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5개의 산업발전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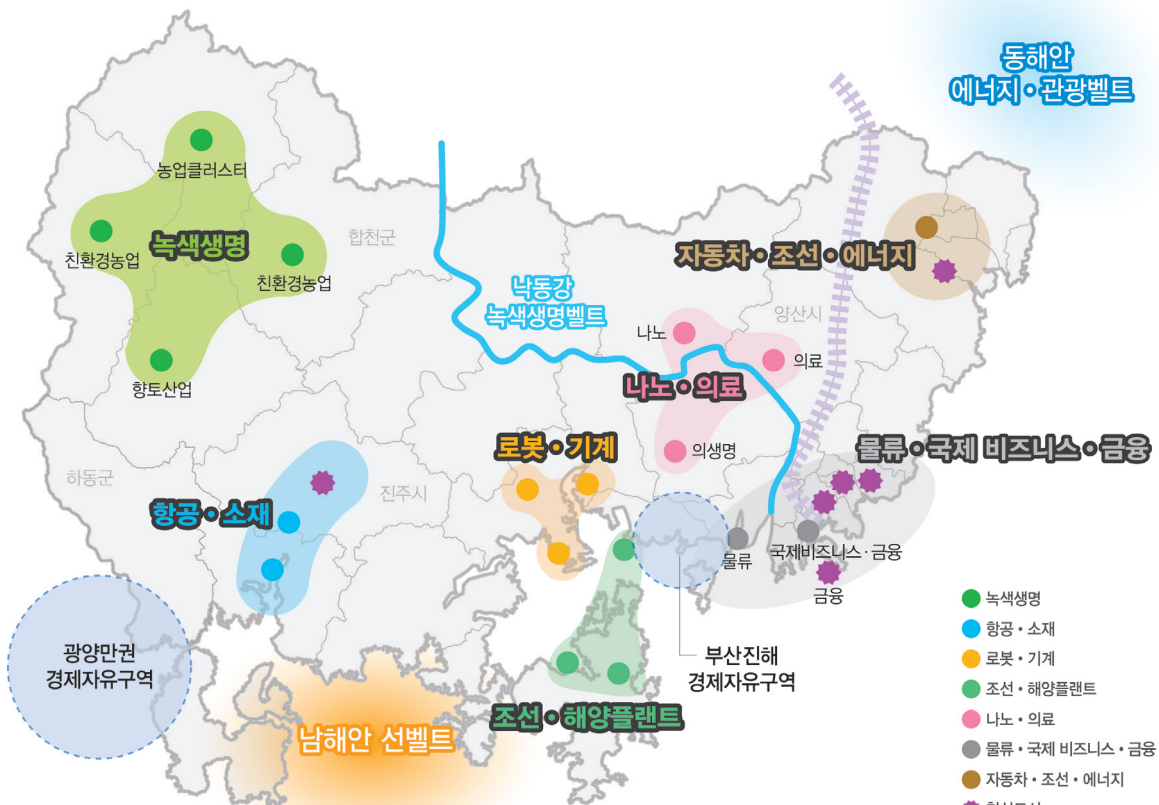
권역 내 상생발전을 위한 1허브 5대 산업 발전축에서 허브는 과학기술, 산업, 행정, 문화의 중심거점을 말한다. 첨단부품소재·에너지산업 발전축은 북부지역의 거점산업단지를 연계한 산업벨트, 그린산업 발전축은 남부지역의 지역특화자원 혁신거점을 연계한 산업벨트, 문화·관광산업 발전축은 해양, 백제, 과학, 중원문화를 연계한 산업벨트이다. 또한 메카트로닉스산업 발전축은 서해안지역의 자동차·기계를 연계한 산업벨트, BIGT첨단산업 발전축은 오송 BT, 오창 IT, 음성 GT를 거점으로 대전, 강원, 전북을 연계한 첨단내륙산업벨트이다.

동남권 공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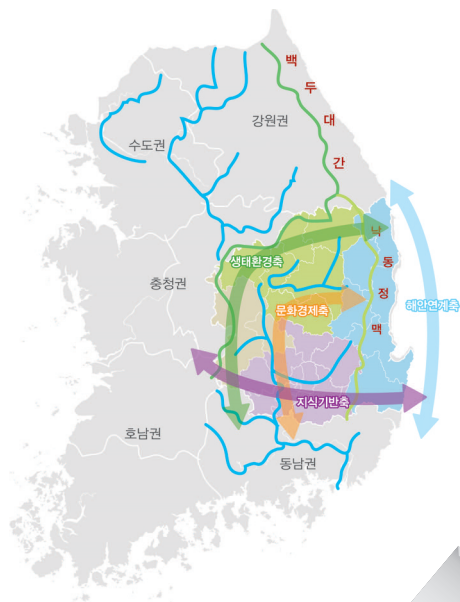
동남권 공간 구상은 통합, 특성화, 거점개발, 초광역연계 등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6대 지역경제권과 3대 광역발전축을 제시한다. 6대 지역경제권은 부산 대도시권(물류, 국제비즈니스, 금융), 울산대도시권(자동차, 조선, 에너지), 진해만 환상도시권(로봇, 기계, 조선·해양플랜트), 내륙성장도시권(나노, 의료·의생명), 사천만 환상도시권(항공우주, 소재), 서북부 성장축진권(녹색생명) 등에 따라 특성화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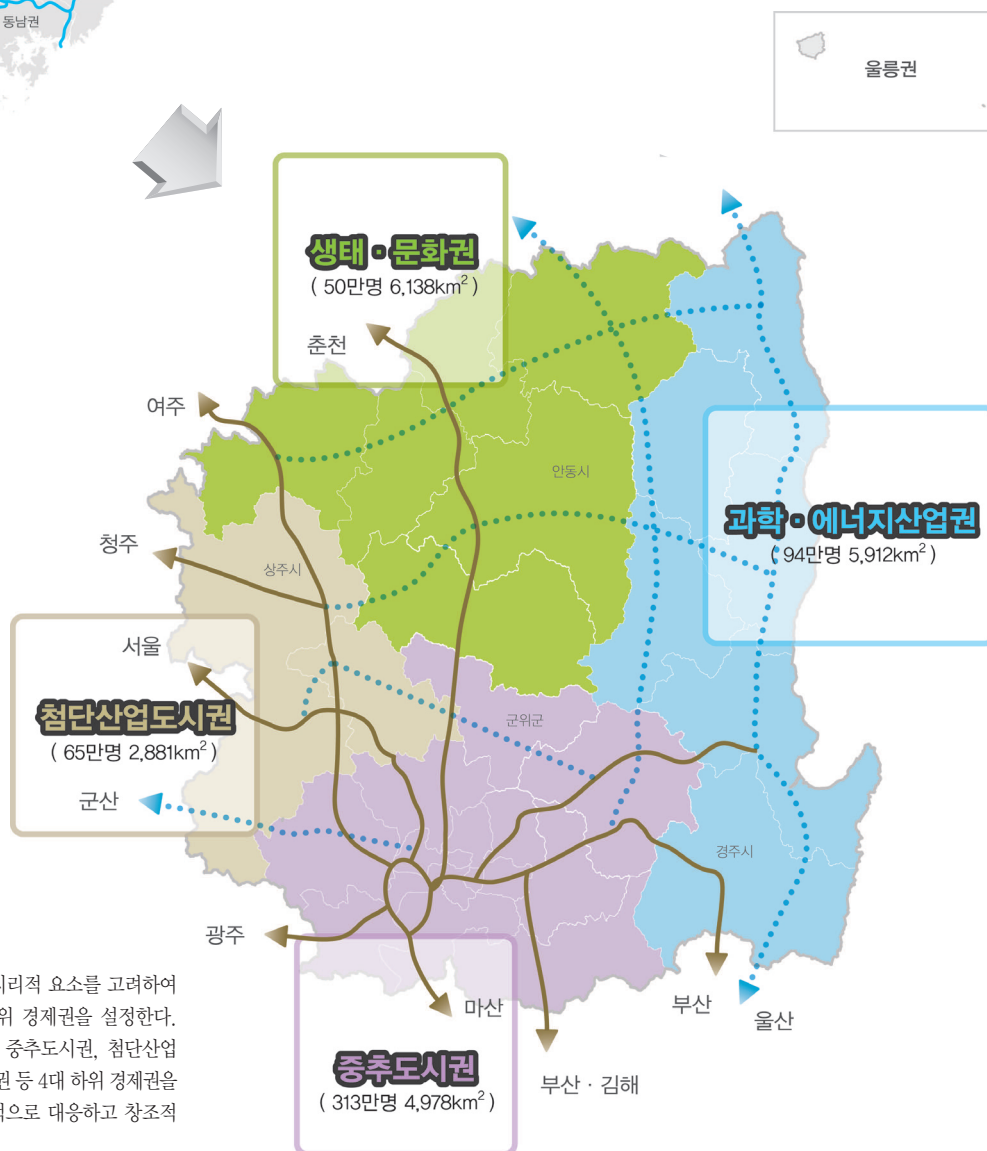
3대 광역발전축 개발은 지역경제권들을 연결하는 광역인프라 및 산업거점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륙발전축, 해양발전축, 낙동강발전축에서 이루어진다.



대경권 공간 구상



대경권 공간 구상은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4개의 발전축을 설정한다. 생태환경축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Eco & Biz벨트를, 문화경제축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관광·바이오벨트를, 지식기반축은 구미~대구~포항을 연계한 하이테크·융합벨트를, 해양연계축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에너지·과학벨트를 발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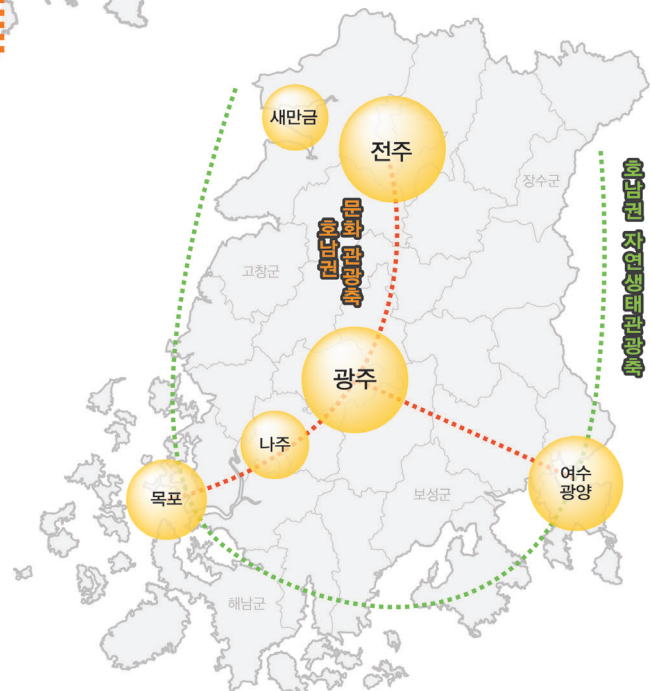


공간구상은 경제적, 정책적, 문화적,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권역 내 최소 50만 명 이상 규모의 하위 경제권을 설정한다. 낙동강축, 동해안축 등 2대 초광역축과 중주도시권, 첨단산업 도시권, 생태·문화권, 과학·에너지산업권 등 4대 하위 경제권을 설정함으로써 광역경제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적 지역발전을 선도한다.

호남권 공간 구상



호남권 공간 구상은 6개 권역, 4개 축, 4개 벨트의 공간 배치 구상을 제시한다. 6개 권역은 광주대도시권(중추도시, 문화, R&D 거점), 새만금권(세계경제자유무역거점), 전주광역도시권(전통문화, 과학기술 허브), 지덕권(내륙녹색성장거점), 목포광역도시권(대중국 교류거점), 광양만광역도시권(동북아 물류허브) 별로 특성화 발전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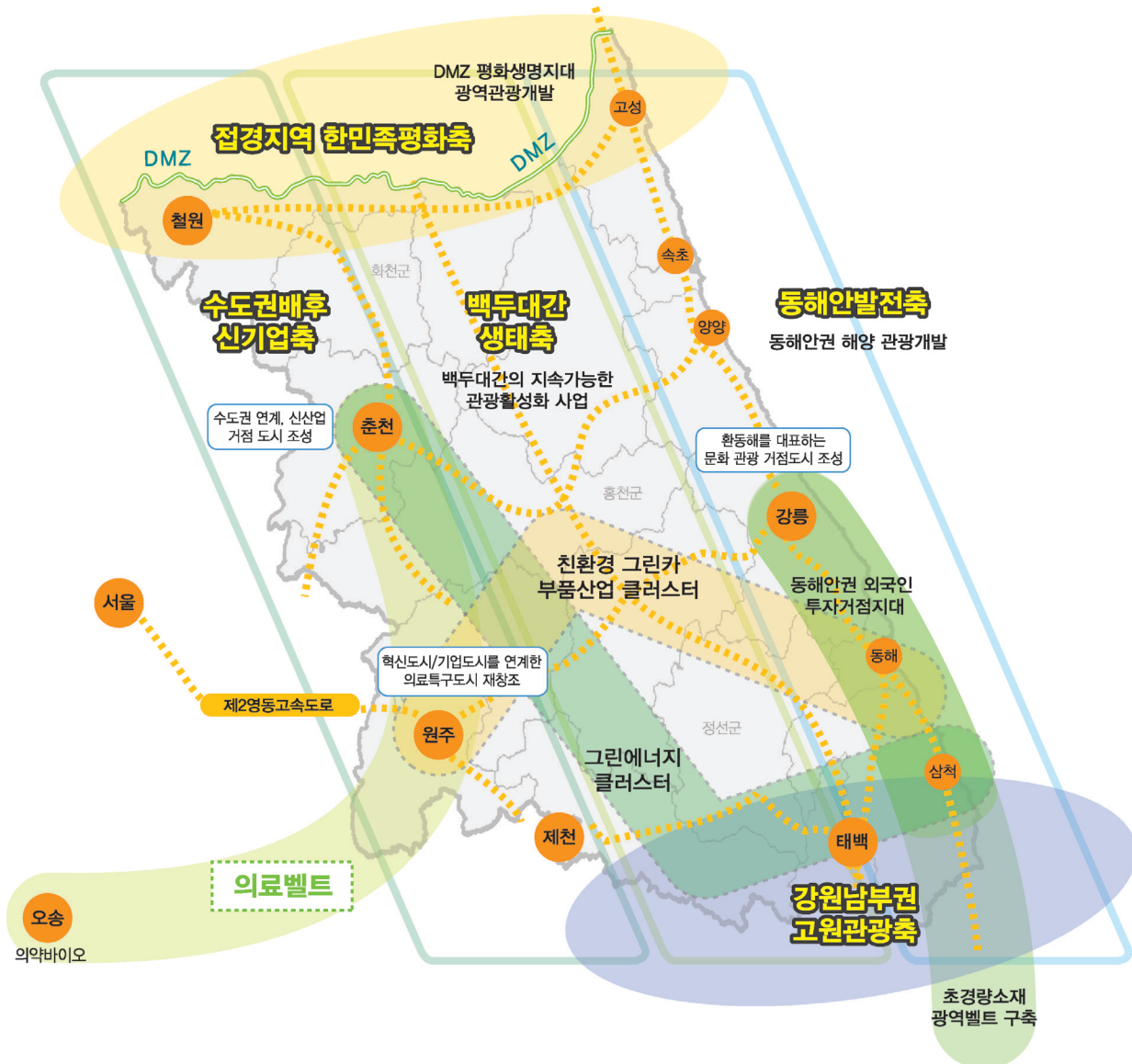


4개 축은 녹색산업축, 녹색·에너지 산업축, 지식·첨단산업 축, 전통·기간산업축 등 호남 광역경제권의 산업발전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4개 벨트는 서해안 신산업 관광벨트, 수변 생태관광벨트, 내륙 청정 휴양 레저벨트, 남해안 문화관광·녹색 벨트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레저·휴양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강원권 공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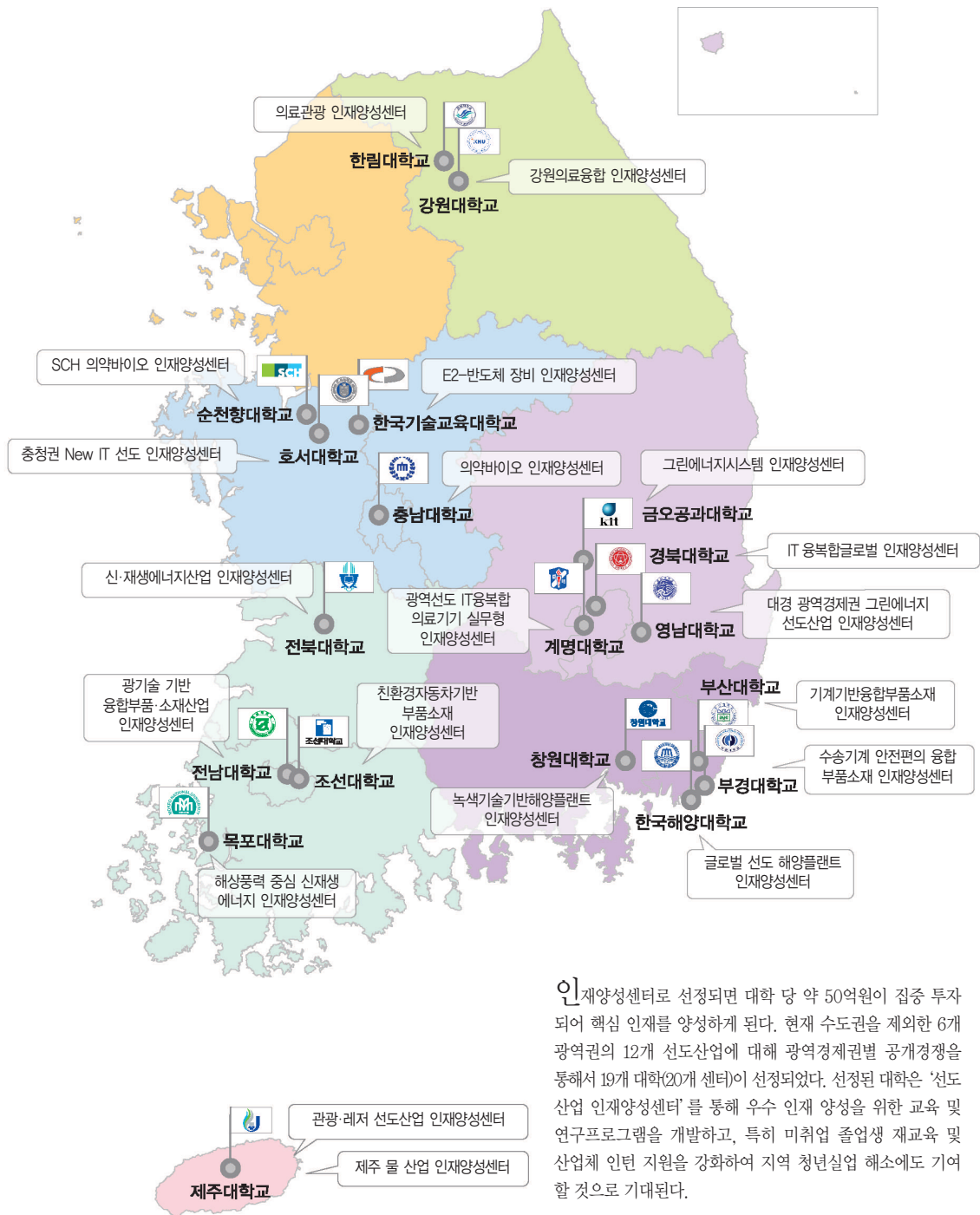
강원권 공간 구상은 수도권배후 신기업축, 동해안 발전축, 백두대간 생태축, 접경지역 한민족평화축, 남부권 고원관광휴양축 등 5대 축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각 축별로 특성화 발전을 추진한다.

수도권 배후 신기업축은 수도권과 연계된 신산업 거점도시, 의료특구도시 등 다양한 지역발전거점을 조성한다. 동해안 발전축은 환동해 대표 문화·관광 거점도시 조성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추진한다. 백두대간 생태축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건설하여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활성화한다. 접경지역 한민족평화축은 DMZ 평화생명지대(PLZ) 광역관광개발을 위한 생태지대를 조성한다. 남부권 고원관광휴양축은 탄광지 생활현장 복원 및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된 고원관광휴양지대 조성을 추진한다.



인재양성사업

인재양성사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정과 연계하여 해당 분야 인재양성을 담당할 지방 거점대학을 지정·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선도산업에 필요한 지방대학 핵심 인재양성을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및 대학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지역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재양성센터로 선정되면 대학 당 약 50억원이 집중 투자되어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권의 12개 선도산업에 대해 광역경제권별 공개경쟁을 통해서 19개 대학(20개 센터)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대학은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미취업 졸업생 재교육 및 산업체 인턴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인프라 구축

광역경제권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하여 광역인프라, 특히 광역경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권 간 연계망이 대폭 확충된다. 권역 어디에서나 주요 교통 결절점까지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간 연계성을 높이는 인프라망도 강화된다. 광역경제권 간 2~3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간선교통망이 구축된다.



더 나아가 광역경제권과 동북아, 세계를 잇는 국제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된다. 인천공항 3단계 확충, 제2 허브공항 건설과 함께 부산항, 광양항이 고부가가치 허브항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성장전략에 맞추어 여수, 청주, 무안, 제주 등 지방공항과 여점항만도 단계적으로 육성된다.

도로	기본노선	-----	공항	기본	✈
	추진노선	-----		예정	✈
	계획노선	-----			
철도	기본노선	+ + + + + + +	항만	기본	⚓
	추진노선	-----			
	계획노선	-----			

테크노파크·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 내 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산업 기술단지이다. 1997년 6개 시범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전국에 18개가 지정되어 있다. 전략산업기획단, 기업지원단, 산업특화센터 등으로 구성된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 및 기술기업 지원을 위한 중추기관이다. 테크노파크 1단계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8년부터 지역산업육성 거점기능 및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는 성장 한계점에 봉착한 우리나라의 단순생산중심 산업단지를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산업단지 R&D 역량 강화,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에 시작된 본 사업에서 현재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는 모두 12개이며, 산업단지별로 산학협력업체(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기존 사업의 성과를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하고자, 5+2 광역경제권별로 “거점단지-연계단지 협력형 광역클러스터”로의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